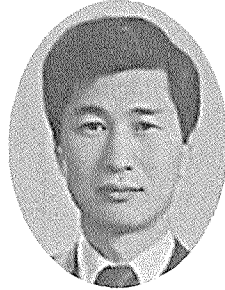


LPG 가격자유화 배경 및 정책방향



김 창 배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장〉

머리말

정부는 금년 1월 1일을 기하여 지난 30여년간 정부 최고판매가격고시 체제로 운영되어온 LPG 가격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도록 가격관리 시스템을 전환하였다. 이 글에서는 LPG 산업의 현황과 더불어 금번 실시한 가격자유화의 추진배경 및 가격자유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LPG 산업현황

LPG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수요의 약 4%를 점유하고 전체가구의 절반이상이 사용중이며, 70~80년대 20%이상의 수요증가 시기를 거쳐 대부분의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원료를 LNG로 전환한 최근에는 증가세가 10% 안팎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국내수요 7.3백만톤중 62%는 제품수입, 잔여 38%는 국내 정유사의 원유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충당되며, 수송용에 40%, 가정·상업연료로 33%, 공업원료등으로 27%가 사용되고 있다.

LPG 유통구조는 2개 수입사 및 5개 정유사, 충전소 726업소, 용기 판매소 52백업소등으로 구성되며, 외환위기이후 LPG 자동차가 급증하여 전체차량중 10%수준인 120만대에 달한다.

한편, 작년에 확정된 에너지 세제개편 방침에 따라, 수송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부탄의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특소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이에따라 2006년경에는 현재 휘발유 대비 35%수준인 LPG 가격이 60%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LPG 가격 자유화 추진배경

LPG 가격에 대한 정부규제의 폐지는 큰 틀에서 볼 때 97년초부터 시행중인 일반석유제품의 가격자유화와 그 목적과 의의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자율화 추세에 부응한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자간 건전경쟁 유도를 통한 대 소비자 서비스 강화도, 정부규제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의 시정등 정부규제 철폐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논리가 LPG 산업의 경우도 크게 다를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LPG 산업은 세계 제5위 LPG

소비국, 제4위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질적 측면에서는 규모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그 근거로 상·하유통구조간 합리적 협력관계의 부재, 사업자의 서비스·안전 의식 부족, 유통구조간 사업영역의 고착화, LPG 가격에 대한 원가변동요인의 적기반영 미흡등의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단편적으로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나, 물가와 수급안정의 이름으로 LPG 산업을 지난 수십년간 정부규제의 틀 속에 가두어온 개발연대의 LPG 정책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 문제제기라 아니할 수 없겠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LPG 산업의 핵심적 규제사항인 정부의 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제도를 폐지기로 방침을 정하고, 99년 1월이후 원료비연동제, 가격표시제, 가격모니터링제등 가격 자유화 준비작업을 지속시행하여 왔다.

그 결과 사업자 및 소비자들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시행되는 정기적인 가격조정에 어느정도 익숙해졌으며,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LPG를 정부고시 최고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등 가격자유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여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가격자유화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작년말에 진행된 관련 논의과정에서, 업소수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한 가격발생이 예상되고, 사업자간 가격경쟁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소지 등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지도 및 단속기능을 통하여 충분히 개선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금번 LPG 가격자유화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시행초기 6개월간은 수입·정유사로 하여금 월별 판매가격을 사전에(2일전) 산자부에 신고토록하고, 가격조사·홍보, 가격표시제, 가스시설 안전점검 의무이행 단속강화와 소비자 불편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등을 통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또한, 금년 상반기중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개정하여, 정량거래제 도입, 사업자에 대한 LPG 품질유지 의무 부과 및 유통 선진화를 위한 사업자의 업무범위 조정 등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간 건전경쟁 유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한 가격인상, 배달거부 등을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법에 근거한 단속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것으로 써, 가격 자유화의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맺음말

LPG 가격 자유화는 이땅에 LPG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지속되어온 산업의 근본적인 규제의 틀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자에 의하여 차원높은 서비스와 안전관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가격 자유화가 시행되고 2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때마침 몰아친 국제 LPG 가격 상승(역대 최고치)의 여파로 국내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은 아쉬운 점이나, 변화의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아무쪼록 LPG 가격자유화가 소비자·업계의 이해와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가격경쟁의 차원을 넘어 서비스·안전책임 제고와 인터넷 시대의 선진영업전략을 요구하는 LPG 산업의 발전적 변혁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그리하여 경쟁력있는 사업자에게 그에 합당하는 시장적 보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